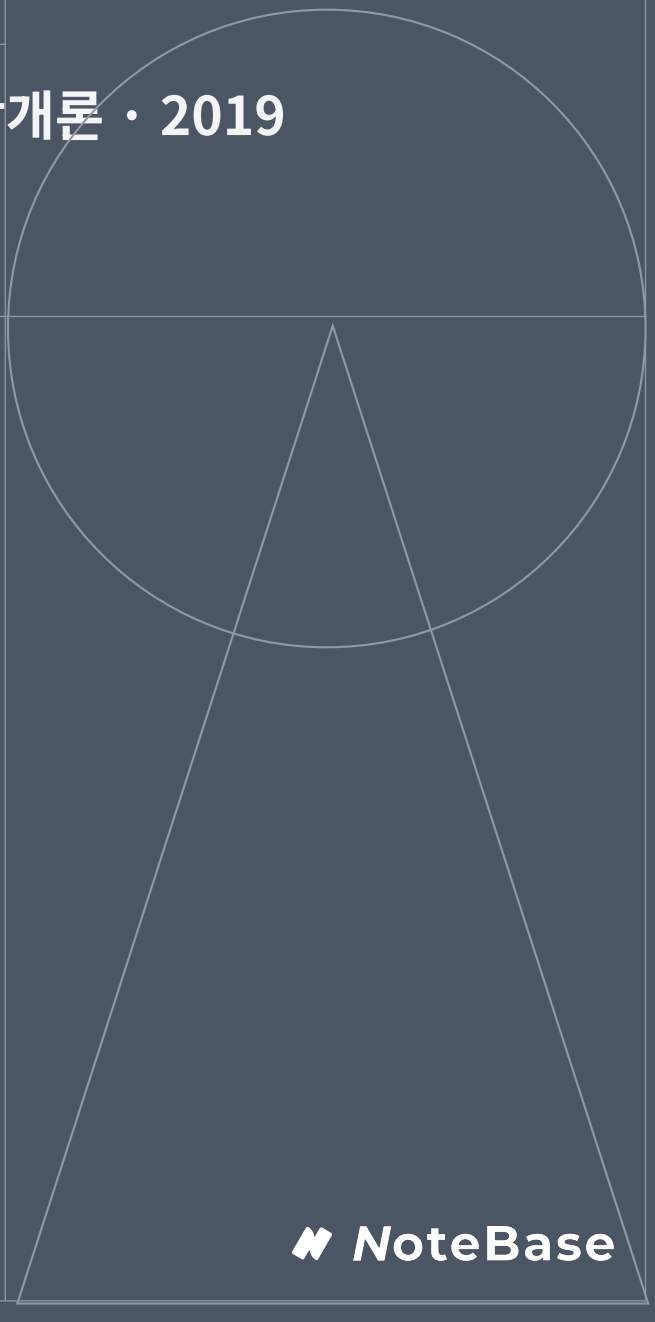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회직/9급 · 경호학개론 · 2019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회직/9급 · 경호학개론 · 2019

공무원/국회직/9급 · 경호학개론 · 2019

1. **경호의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합법성 : 실정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② 보안성 : 경호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를 은밀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③ 협력성 : 경호는 단독적인 활동으로 배치된 곳만 관리하면 된다.
④ 중립성 : 정치적·이념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한다.
⑤ 희생성 :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마음가짐과 정신이 필요하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경호의 기본 이념인 합법성·보안성·협력성·중립성·희생성의 의미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합법성은 경호활동이 실정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보안성은 경호대상자와 경호업무에 관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신중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협력성은 경호가 여러 요원과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수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중립성은 정치적·이념적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희생성은 경호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명감과 정신을 뜻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합법성은 경호활동이 실정법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옳다.
② O — 보안성은 경호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관련 정보를 누설하지 않고 은밀하고 신중하게 관리하는 것을 중시하므로 옳다.
③ X — 틀린 표현은 '단독적인 활동으로 배치된 곳만 관리하면 된다'이다. 협력성은 경호가 단독으로 완결되는 활동이라는 뜻이 아니라, 경호요원 상호 간 및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수행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④ O — 중립성은 경호업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이념적으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옳다.
⑤ O — 희생성은 경호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안전과 이익을 희생할 수 있는 마음가짐과 정신을 요구하므로 옳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은 '협력성'이라는 명칭을 제시하면서 내용은 협력의 반대인 단독 활동과 담당 구역만의 관리를 설명한 선지이다. 협력성의 핵심은 독자적 수행이 아니라 인적·기관적 협조와 공조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이념의 명칭과 설명의 핵심어를 연결한다. 합법성은 법의 범위, 보안성은 정보의 비밀 유지, 협력성은 요원·유관기관의 공조, 중립성은 정치·이념적 불편부당, 희생성은 자기희생과 사명감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합법은 법, 보안은 비밀, 협력은 공조, 중립은 불편부당, 희생은 사명감이다.

NoteBase

2. 공경호의 분류 중 <보기>에 해당하는 구분으로 옳은 것은?

<보 기>

공식경호, 비공식경호, 약식경호 등으로 구분한다.

① 성격에 따른 구분
② 수준에 따른 구분
③ 대상에 따른 구분
④ 장소에 따른 구분
⑤ 이동수단에 따른 구분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공식경호·비공식경호·약식경호가 경호를 어떤 기준으로 분류한 것인지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성격에 따른 구분은 경호행사가 지닌 공식성 및 의전 형식의 정도를 기준으로 경호를 나누는 것이다. 공식경호는 공식 일정과 정해진 의전 절차에 따라 실시하는 경호이고, 비공식경호는 비공식 일정에 맞추어 실시하는 경호이며, 약식경호는 공식경호의 절차와 형식을 간소화한 경호이다. 따라서 공식경호·비공식경호·약식경호는 성격에 따른 분류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공식성 및 의전 형식의 정도라는 경호의 성격을 기준으로 공식경호·비공식경호·약식경호를 구분하므로 옳다.
② X — 틀린 표현은 '수준에 따른 구분'이다. 제시된 세 유형은 경호 수준이 아니라 공식성 및 의전 형식이라는 성격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올바르게는 '성격에 따른 구분'이다.
③ X — 틀린 표현은 '대상에 따른 구분'이다. 경호를 받는 대상이 누구인지가 아니라 경호행사의 공식적 성격을 기준으로 나눈 것이다. 올바르게는 '성격에 따른 구분'이다.
④ X — 틀린 표현은 '장소에 따른 구분'이다. 경호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니라 공식 절차와 형식의 정도를 기준으로 나눈 것이다. 올바르게는 '성격에 따른 구분'이다.
⑤ X — 틀린 표현은 '이동수단에 따른 구분'이다. 차량 등 이동수단의 종류가 아니라 경호행사의 공식성과 의전 형식을 기준으로 나눈 것이다. 올바르게는 '성격에 따른 구분'이다.

오답 포인트

'공식·비공식·약식'을 경호의 규모나 수준을 나타내는 말로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이 용어들은 경호의 강약이 아니라 공식성과 의전 형식의 차이를 나타낸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분류 명칭에 '공식·비공식·약식'이 제시되면 경호의 대상·장소·이동수단이 아니라 공식성과 의전 형식, 즉 성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공식·비공식·약식은 경호의 강약이 아니라 성격의 구분이다.

NoteBase

3. 경호의 특별원칙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호원은 자신이 맡은 자기 담당구역 안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사태에 대해서도 자신만이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한다.

② 경호원은 은밀하고 침묵 속에서 행동하며 항상 경호대상자의 신변을 엄호할 수 있는 곳에 행동반경을 두고 경호에 임한다.

③ 경호대상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출입구나 통로는 하나만 필요하고 여러 개의 출입구와 통로는 불필요하다.

④ 경호대상자를 암살자 또는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자들로부터 떼어놓는다.

⑤ 경호원은 경호대상자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경호의 특별원칙 네 가지와 일반원칙인 은밀경호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경호의 특별원칙은 자기담당구역 책임의 원칙, 목표물 보존의 원칙,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 자기희생의 원칙으로 구성된다. 반면 은밀경호는 경호대상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은밀하고 침묵 속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일반원칙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자기담당구역 책임의 원칙에 해당한다. 경호원은 자신이 맡은 구역에서 발생한 사태를 자기 책임으로 해결해야 한다.

② X — 은밀하고 침묵 속에서 행동하며 경호대상자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위치를 유지한다는 내용은 특별원칙이 아니라 일반원칙인 은밀경호의 원칙이다. 틀린 부분은 이를 경호의 특별원칙에 포함한 점이며, 올바르게는 '경호의 일반원칙인 은밀경호의 원칙에 해당한다'이다.

③ O —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에 해당한다. 출입구와 통로를 가급적 하나로 통제하면 접근자를 확인하고 위해요소의 침투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④ O — 목표물 보존의 원칙에 해당한다. 경호대상자를 암살자나 위해 가능성이 있는 자로부터 이격하여 안전을 확보한다.

⑤ O — 자기희생의 원칙에 해당한다. 경호원은 위급한 상황에서도 경호대상자를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는 경호 활동으로서 내용 자체가 자연스러워 맞는 선지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특별원칙'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은밀하고 침묵'이라는 표현은 특별원칙이 아니라 일반원칙인 은밀경호의 표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특별원칙 여부를 물으면 '담당구역 책임·목표물 보존·통제 지점 하나·자기희생'의 네 항목에 대응하는지 확인한다. 은밀·침묵·불편 최소화가 나오면 일반원칙인 은밀경호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특별원칙은 '담당·보존·한 지점·희생', 은밀경호는 일반원칙이다.

NoteBase

4. 선발경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호대상자의 외부 일정에 따라 경호대상자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하여 사전에 실시하는 경호활동을 말한다.

② 경호대상자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정보활동, 보안활동, 검측활동, 안전활동 등을 실시한다.

③ 주변 지형, 유동 인구, 승·하차지점, 동선 등을 파악하여 경호계획을 세우며, 관계자와 협조 및 의전 등을 조율한다.

④ 우발적인 공격을 당했을 때는 대적보다는 경호대상자를 방호하여 대피시키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⑤ 지형과 상황에 맞는 비상대응계획과 비상대피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상황에 대비하여야 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선발경호의 사전 예방·준비 활동과 공격 발생 후의 현장 대응 활동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선발경호는 경호대상자보다 먼저 행사 현장에 도착하여 위해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경호 여건을 조성하는 활동이다. 주요 업무에는 현장 정찰·보안·검측·안전 활동, 지형과 유동 인구 및 승·하차 지점과 이동 동선의 파악, 관계기관과의 협조, 비상대응계획과 비상대피계획의 수립이 포함된다. 반면 실제 공격이 발생한 순간 경호대상자를 방호하고 대피시키는 것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수행경호·근접경호의 대응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경호대상자의 외부 일정에 앞서 현장에 먼저 도착하여 사전 경호활동을 실시하는 것은 선발경호의 정의에 해당한다.

② O - 정찰활동, 보안활동, 검측활동, 안전활동은 경호대상자가 도착하기 전에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제거하는 선발경호의 주요 업무이다.

③ O - 주변 지형, 유동 인구, 승·하차 지점, 이동 동선을 파악하여 경호계획을 세우고 관계자와 협조·조정하는 것은 선발경호의 사전 준비 활동이다.

④ X - 틀린 부분은 '우발적인 공격을 당했을 때 경호대상자를 방호하여 대피시키는 것'이다. 이는 공격이 실제로 발생한 현장에서의 수행경호·근접경호 대응 원칙이지 선발경호의 설명이 아니다. 선발경호에 맞게 고치면 공격 가능성과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경호대상자의 안전한 대피를 위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는 활동이다.

⑤ O - 지형과 상황에 맞는 비상대응계획 및 비상대피계획을 미리 수립하는 것은 우발상황에 대비하는 선발경호 업무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④의 내용은 경호 일반 원칙으로는 타당해 보이지만, '공격을 당했을 때'라는 표현 때문에 사전 활동인 선발경호가 아니라 공격 발생 후의 현장 대응을 설명한다. 문제는 경호 원칙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선발경호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경호대상자 도착 전의 현장 점검·위험 제거·동선 파악·협조·계획 수립이면 선발경호로 판단한다. 공격 발생 후의 방호·대피·제압처럼 현장에서 즉시 이루어지는 대응이면 선발경호와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선발경호는 '먼저 가서 살피고 계획하는 경호', 수행·근접경호는 '현장에서 방호하고 대피시키는 경호'이다.

NoteBase

5. 근접경호 수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호원 각각의 위치와 경호 대형은 고정적이다.

② 경호원은 경호대상자와 군중 간에 틈을 주지 말고, 경호대상자 주위에서 경호활동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③ 경호원은 책임구역에 따라 경계임무를 수행하고 돌발사태 발생 시 인적 방벽을 형성하여 경호대상자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대피시킨다.

④ 경호원은 경호대상자나 그의 소지품에 접근하려는 사람의 신분 및 직위와 본인여부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⑤ 타 지역으로 이동하기 전 경호원은 이동로, 소요시간, 경호 대형, 주위의 특이사항, 주의사항 및 이동 위치를 사전에 경호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근접경호 수행 시 경호원의 배치와 대형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된다는 원칙과 이동·접근통제·우발상황 대응의 기본 수칙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근접경호는 경호대상자의 가까운 거리에서 위해요인을 차단하고 안전한 이동과 대피를 확보하는 활동이다. 경호원의 위치와 경호 대형은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호대상자, 장소, 이동 상황, 주변 환경과 위협 정도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바뀐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경호원 각각의 위치와 경호 대형은 고정적이다'라는 표현이 틀렸다. 근접경호에서는 상황 변화와 위협 방향에 즉시 대응해야 하므로 경호원의 위치와 대형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② O
경호대상자와 군중 사이에 틈이 생기면 위해자가 접근하기 쉬워진다. 따라서 불필요한 간격을 만들지 않으면서 경호대상자 주변의 경호활동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③ O
각 경호원은 책임구역에 따라 경계임무를 수행하고, 돌발상태가 발생하면 인적 방벽을 형성하여 위해를 차단하면서 경호대상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다.

④ O
경호대상자나 소지품에 접근하려는 사람은 잠재적 위해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신분, 직위 및 본인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⑤ O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전에는 이동로, 소요시간, 경호 대형, 주변의 특이사항과 주의사항, 도착 또는 이동 위치를 경호대상자에게 미리 알려 원활하고 안전한 이동을 준비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①의 함정은 질서 있는 경호 대형을 '고정된 대형'으로 오해하게 하는 데 있다. 경호 대형에는 기본 형태가 있지만 실제 수행에서는 경호대상자의 움직임, 장소와 군중 상태, 위해 방향에 따라 위치와 간격이 계속 조정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근접경호 원칙을 판단할 때는 '위협 변화에 대한 즉응성'을 기준으로 삼는다. 위치·대형을 고정한다고 하면 부적절하고, 접근통제·경계구역 분담·인적 방벽·안전대피·이동 전 정보공유를 강조하면 적절한 설명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근접경호의 대형은 고정이 아니라 상황 대응형이며, 기본 흐름은 접근 확인－위해 차단－대상자 보호·대피－안전 이동이다.

NoteBase

6. 우리나라 정부수립 이후 경호기관 변천과정의 순서로 옳은 것은?

① 중앙정보부 경호대 → 청와대 경찰관 파견대 → 경무대 경찰서 → 대통령경호실 → 대통령경호처
② 청와대 경찰관 파견대 → 중앙정보부 경호대 → 경무대 경찰서 → 대통령경호실 → 대통령경호처
③ 청와대 경찰관 파견대 → 경무대 경찰서 → 중앙정보부 경호대 → 대통령경호실 → 대통령경호처
④ 경무대 경찰서 → 청와대 경찰관 파견대 → 중앙정보부 경호대 → 대통령경호실 → 대통령경호처
⑤ 경무대 경찰서 → 중앙정보부 경호대 → 청와대 경찰관 파견대 → 대통령경호실 → 대통령경호처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정부 수립 이후 대통령 경호를 담당한 기관이 시대에 따라 어떤 순서로 개편되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경무대 경찰서 → 청와대 경찰관 파견대 → 중앙정보부 경호대 → 대통령경호실 → 대통령경호처

경무대 경찰서에서 출발하여 청와대 경찰관 파견대를 거친 뒤 중앙정보부 경호대로 이어졌고, 이후 독립된 대통령경호실을 거쳐 대통령경호처로 개편되었다. 앞의 세 조직은 초기 경호 체계의 변천이고, 대통령경호실과 대통령경호처는 그 뒤에 이어지는 전담 경호기관의 변천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중앙정보부 경호대를 가장 앞에 둔 점과 청와대 경찰관 파견대를 경무대 경찰서보다 앞에 둔 점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경무대 경찰서 → 청와대 경찰관 파견대 → 중앙정보부 경호대 → 대통령경호실 → 대통령경호처이다.

② X — 청와대 경찰관 파견대와 중앙정보부 경호대를 경무대 경찰서보다 앞에 둔 점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경무대 경찰서가 먼저이고, 그다음이 청와대 경찰관 파견대, 중앙정보부 경호대 순이다. 전체 순서는 경무대 경찰서 → 청와대 경찰관 파견대 → 중앙정보부 경호대 → 대통령경호실 → 대통령경호처이다.

③ X — 경무대 경찰서를 중앙정보부 경호대보다 앞에 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중앙정보부 경호대 전에 청와대 경찰관 파견대가 위치해야 한다. 올바르게는 경무대 경찰서 → 청와대 경찰관 파견대 → 중앙정보부 경호대 → 대통령경호실 → 대통령경호처이다.

④ O — 경무대 경찰서 → 청와대 경찰관 파견대 → 중앙정보부 경호대 → 대통령경호실 → 대통령경호처의 역사적 변천 순서를 정확히 제시한다.

⑤ X — 중앙정보부 경호대와 청와대 경찰관 파견대의 선후를 뒤바꾼 점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경무대 경찰서 다음에 청와대 경찰관 파견대가 오고, 그 뒤에 중앙정보부 경호대가 이어진다. 전체 순서는 경무대 경찰서 → 청와대 경찰관 파견대 → 중앙정보부 경호대 → 대통령경호실 → 대통령경호처이다.

오답 포인트

모든 선지에서 마지막의 대통령경호실 → 대통령경호처는 같으므로, 앞의 세 조직 순서를 섞어 놓은 부분이 핵심 함정이다. 특히 청와대 경찰관 파견대가 중앙정보부 경호대보다 먼저라는 점을 놓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변천 순서 문제에서는 모든 항목을 한꺼번에 비교하기보다 공통된 뒷부분을 먼저 제외하고, 서로 다른 앞부분의 선후관계를 확인한다. 이 문항에서는 경무대 경찰서 → 청와대 경찰관 파견대 → 중앙정보부 경호대의 순서가 맞는 선지를 찾으면 된다.

암기 포인트

경무대 경찰서 → 청와대 파견대 → 중앙정보부 경호대 → 대통령경호실 → 대통령경호처의 흐름으로 기억한다.

NoteBase

7. 경호활동의 4단계 순서가 바르게 나열된 것으로 옳은 것은?

① 대비 - 예방 - 평가 - 대응
② 예방 - 대비 - 대응 - 평가
③ 예방 - 조사 - 대응 - 평가
④ 조사 - 예견 - 인식 - 대응
⑤ 조사 - 예방 - 대응 - 평가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경호활동의 4단계인 예방·대비·대응·평가의 선후관계를 묻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1. 예방 —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위험을 줄이는 단계이다.
2. 대비 — 발생 가능한 위해상황에 대응할 계획·인력·장비 등을 갖추는 단계이다.
3. 대응 — 실제 위해상황이 발생했을 때 계획에 따라 조치하는 단계이다.
4. 평가 — 대응 결과와 경호활동 전반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보완하는 단계이다.

왜 이 순서인가: 위험을 먼저 예방하고, 예방만으로 막지 못할 상황에 대비한 뒤, 실제 상황에 대응하고, 마지막으로 그 결과를 평가해야 다음 경호활동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대비-예방-평가-대응'은 예방보다 대비를 앞세우고 평가와 대응의 순서도 뒤바꾼 배열이다. 올바르게는 '예방-대비-대응-평가'이다.

② O — '예방-대비-대응-평가'는 위험 발생 전의 예방과 대비, 발생 시의 대응, 종료 후의 평가로 이어지는 경호활동의 올바른 4단계이다.

③ X — '조사'는 경호활동 4단계에서 '대비'가 들어갈 자리를 바꾼 표현이다. 올바르게는 '예방-대비-대응-평가'이다.

④ X — '조사-예견-인식-대응'은 예방·대비·대응·평가라는 4단계 체계와 일치하지 않으며, 사후 평가 단계도 빠져 있다. 올바르게는 '예방-대비-대응-평가'이다.

⑤ X — '조사-예방-대응-평가'는 첫 단계에 조사를 두고 대비 단계를 누락한 배열이다. 올바르게는 '예방-대비-대응-평가'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은 예방과 대비, 대응과 평가의 순서를 각각 바꾸어 놓았고, ③·⑤는 '대비'를 '조사'로 바꾸었다. ④는 경호활동과 관련 있어 보이는 용어를 나열했지만 정식 4단계와 다르며 평가도 없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절차형 문제에서는 시간 흐름을 기준으로 발생 전의 '예방→대비', 발생 시의 '대응', 종료 후의 '평가'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예-대-대-평: 예방하고 대비하여 대응한 뒤 평가한다.

NoteBase

8. 안전대책 및 검측에 관하여 <보기>의 (가)~(다)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옳은 것은?

<보 기>

(가) : 폭발물 등 각종 유해물을 탐지하여 제거하는 활동

(나) : 경호대상자가 이용하는 물품과 시설 등의 안전상태를 확인하는 활동

(다) : 안전상태를 확인 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활동

	(가)	(나)	(다)
①	안전점검	안전검사	안전유지
②	안전점검	안전유지	안전검사
③	안전검사	안전점검	안전유지
④	안전검사	안전유지	안전점검
⑤	안전유지	안전점검	안전검사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안전점검·안전검사·안전유지를 활동의 대상과 단계에 따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안전점검: 폭발물 등 각종 유해물을 탐지하여 제거하는 활동이다. 키워드는 '유해물 탐지·제거'이다.
안전검사: 경호대상자가 이용하는 물품과 시설 등의 안전상태를 확인하는 활동이다. 키워드는 '물품·시설의 상태 확인'이다.
안전유지: 확인된 안전상태가 계속 유지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활동이다. 키워드는 '확인 후 지속 관리'이다.
세 개념은 안전점검이 탐지·제거, 안전검사가 상태 확인, 안전유지가 지속 관리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가)의 유해물 탐지·제거는 안전점검, (나)의 물품·시설 안전상태 확인은 안전검사, (다)의 확인 후 지속 관리는 안전유지에 해당한다.
② X — 틀린 부분은 (나)를 안전유지, (다)를 안전검사로 바꾼 것이다. 올바르게는 (나)가 안전검사이고 (다)가 안전유지이다.
③ X — 틀린 부분은 (가)를 안전검사, (나)를 안전점검으로 바꾼 것이다. 올바르게는 (가)가 안전점검이고 (나)가 안전검사이다. (다)의 안전유지는 맞다.
④ X — 틀린 부분은 (가)를 안전검사, (나)를 안전유지, (다)를 안전점검으로 연결한 것이다. 올바르게는 (가) 안전점검, (나) 안전검사, (다) 안전유지이다.
⑤ X — 틀린 부분은 (가)를 안전유지, (나)를 안전점검, (다)를 안전검사로 연결한 것이다. 올바르게는 (가) 안전점검, (나) 안전검사, (다) 안전유지이다.

오답 포인트

‘점검’과 ‘검사’를 일상적 어감만으로 구별하면 (가)와 (나)를 바꾸기 쉽다. 이 문항에서는 ‘유해물 탐지·제거’가 안전점검이고, ‘이용 물품·시설의 상태 확인’이 안전검사라는 대상과 행위의 차이가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장 속 핵심 동사를 확인한다. 탐지하여 제거하면 안전점검, 안전상태를 확인하면 안전검사, 확인한 뒤 계속 관리하면 안전유지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탐지·제거는 점검, 상태 확인은 검사, 지속 관리는 유지이다.

NoteBase

9. 경호정보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보는 객관적으로 평가된 정확한 지식이다.
② 사용목적에 맞추어 평가, 분석, 종합, 해석된 완전한 지식이다.
③ 정보는 사용자 목적에 맞추어 작성된 지식이다.
④ 정보는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적시에 공급되어야 한다.
⑤ 정보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과거와 현재의 것을 불문한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정보의 정확성·완전성·목적 적합성·적시성을 구별하고, 정보의 가치가 시간과 무관하다는 잘못된 설명을 찾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정보는 자료를 사용 목적에 맞게 평가·분석·종합·해석하여 의미와 유용성을 갖게 한 지식이다. 좋은 정보는 정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사용자의 목적에 적합하고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갖추어 필요한 시점에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정보의 가치는 시간의 영향을 받으므로 적시성이 중요하다.

선지별 해설

① O — 정보는 단순한 자료가 아니라 객관적인 평가와 처리를 거쳐 정확성과 의미를 갖춘 지식이므로 옳다.
② O — 자료를 사용 목적에 맞게 평가·분석·종합·해석하여 완전성과 유용성을 높인 것이 정보이므로 옳다.
③ O — 정보는 사용자의 의사결정이나 문제 해결 목적에 맞게 작성되어야 하므로 목적 적합성을 설명한 옳은 선지이다.
④ O — 정보는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시점에 제공되어야 활용 가치가 있으므로 적시성을 설명한 옳은 선지이다.
⑤ X — 틀린 표현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과거와 현재의 것을 불문한다'이다. 정보의 가치는 시간의 영향을 받으며, 오래되어 시의성을 잃은 정보는 유용성이 낮아질 수 있다. 올바르게는 '정보는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시점에 제공되어야 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이다.

오답 포인트

정보가 과거 사실도 내용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과 정보의 가치가 시간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혼동하기 쉽다. 과거 자료도 현재 목적에 유용할 수 있지만, 정보의 유용성 자체는 제공 시점과 시의성의 영향을 받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정보의 특성을 묻는 선지에서는 정확성, 완전성, 목적 적합성, 적시성을 차례로 확인한다. '언제 제공되어도 같다', '시간과 무관하다'와 같은 절대적 표현은 적시성에 어긋나는지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좋은 정보는 정확하고, 목적에 맞고, 충분하며, 제때 제공된다.

NoteBase

10. 국회법 상 질서와 경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를 둔다.

② 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경위는 회의장 건물 밖에서, 국가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호한다.

④ 경위나 국가경찰공무원은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회의장 안에서는 의장의 명령 없이 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

⑤ 의장은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한다.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국회법」상 국회 경호의 주체와 구역, 의장의 경찰공무원 파견 요구 및 현행범인 체포 절차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경위와 경찰공무원이 각각 어느 구역에서 경호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다.

용어 풀이

경호권은 회기 중 국회 안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장이 행사하는 권한이다. 경위는 국회에 두는 경호 인력이고, 경찰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정부에서 일정 기간 파견되는 인력이다.

핵심 구분

「국회법」 제143조에 따라 의장은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한다. 제144조에 따라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의장의 지휘를 받아 경호한다. 의장은 필요할 때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0조에 따라 국회 안의 현행범인은 먼저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지만, 회의장 안에서 의원을 체포하려면 의장의 명령이 있어야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를 둔다는 내용으로 옳다.

② O
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옳다. 선지의 '국가경찰공무원'은 종전 조문의 용어이고, 현행 조문은 '경찰공무원'으로 표현한다.

③ X
경호 구역을 서로 바꾸어 서술하였다.
틀린 표현: 경위는 회의장 건물 밖에서, 국가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호한다.
올바른 표현: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

④ O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으면 경위나 경찰공무원은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회의장 안에서 의원을 체포하려면 의장의 명령이 있어야 하므로 옳다. 선지의 '국가경찰공무원'은 현행 조문상 '경찰공무원'으로 표현한다.

⑤ O
의장은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하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③은 '국회 안'과 '회의장 건물 안'을 혼동하게 만든다. 의장의 경호권은 국회 안에서 행사되지만, 실제 경호업무의 담당 구역은 경위가 회의장 건물 안, 경찰공무원이 회의장 건물 밖으로 나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국회 경호 문제에서는 먼저 권한의 주체가 의장인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경호 구역을 '경위는 안, 경찰공무원은 밖'으로 대응시킨다. 현행범인 체포는 원칙적으로 체포 후 의장의 지시를 받지만, 회의장 안의 의원은 의장의 명령이 먼저 필요하다는 예외를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 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이다.

NoteBase

11. 경호조직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해수법의 지능화,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호전문성이 요구된다.
② 경호기관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호조직의 폐쇄성을 항상 유지시켜야 한다.
③ 경호조직은 경호의 집행기관적 성격으로 인해 계층성의 특성이 있다.
④ 위해요소의 증가로 인하여 경호조직의 대규모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⑤ 조직들은 분화된 조직구조 속에서 각 분야마다 전문화를 기하여 첨단화된 경향을 가지고 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현대 경호환경의 변화에 따라 경호조직에 나타나는 전문성, 개방성, 계층성, 대규모화, 분화·첨단화의 특징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경호조직은 위해수법의 지능화·고도화와 위해요소의 증가에 대응하여 전문화되고 규모가 커지며, 기능별 분화와 기술적 첨단화가 이루어지는 집행조직이다. 집행의 통일성과 명령 전달을 위해 계층성을 가지지만, 권위 유지를 이유로 폐쇄성을 항상 고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필요한 범위에서 개방성과 협조성을 확보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위해수법이 지능화·고도화될수록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므로 경호전문성이 요구된다.
② X — 틀린 표현은 '경호조직의 폐쇄성을 항상 유지시켜야 한다'이다. 보안상 필요한 비밀성과 제한성은 유지하되, 권위 유지를 이유로 폐쇄성을 절대화해서는 안 되며 유관기관 및 사회와의 협조를 위한 개방성을 확보해야 한다.
③ O — 경호조직은 명령을 집행하는 기관적 성격이 강하므로 지휘·명령 체계와 상하 관계가 분명한 계층성을 가진다.
④ O — 위해요소가 다양해지고 증가하면 대응 인력과 기능도 확대되므로 경호조직의 대규모화가 나타난다.
⑤ O — 현대 경호조직은 기능과 업무가 세분된 구조 속에서 분야별 전문화를 이루고 과학기술과 장비를 활용하는 첨단화 경향을 가진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의 '항상'이 함정이다. 경호업무에는 비밀성과 보안성이 필요하지만, 이를 조직 전체의 영구적 폐쇄성과 동일시하면 안 된다. 현대 경호조직은 협업과 정보 교류가 필요하므로 제한적 개방성도 함께 요구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현대 경호조직의 특징은 위협 증가에 따른 전문화·대규모화·분화·첨단화, 집행조직의 계층성으로 정리한다. '항상 폐쇄적이어야 한다'처럼 폐쇄성을 절대화하는 표현은 틀린 것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현대 경호조직은 전문화·대규모화·분화·첨단화·계층성, 폐쇄성의 절대화는 금물이다.

NoteBase

12. 형식적 의미의 경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호관계법규에 규정된 현실적인 경호기관을 기준으로 정립된 개념이다.

② 실정법상 일반 경호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일체의 경호작용을 말한다.

③ 경호의 주체가 국가, 민간에 관계없이 경호대상자를 보호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④ 법.제도.기관의 관념에서 실정법에 인정된 기관이나 조직이 수행하는 경호활동을 경호로 인정한다.

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로서의 경호는 형식적 의미의 경호개념이다.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형식적 의미의 경호와 실질적 의미의 경호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경호의 범위를 정할 때 법령상 기관과 권한을 기준으로 하는지, 실제 보호활동의 성질을 기준으로 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용어 풀이

형식적 의미의 경호는 실정법에 경호기관으로 규정된 기관이나 법령상 경호 권한을 가진 기관·조직이 수행하는 경호작용을 말한다. 실질적 의미의 경호는 수행 주체가 국가기관인지 민간인지와 관계없이 경호대상자를 보호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핵심 구분

형식적 의미는 '누가 어떤 법적 근거로 수행하는가'를 기준으로 하고, 실질적 의미는 '실제로 경호대상자를 보호하는 활동인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법률에 근거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나 경비업법상 신변보호업무는 형식적 의미에 포함될 수 있지만, 공·사 구분 없이 모든 보호활동을 포괄한다는 설명은 실질적 의미에 해당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경호관계법규에 규정된 현실의 경호기관을 기준으로 정립한 개념이라는 설명은 법적·제도적 주체를 기준으로 하는 형식적 의미의 경호에 해당한다.
② O — 실정법상 일정한 경호기관에 부여된 권한에 속하는 실제 경호작용을 가리키므로 형식적 의미의 경호에 대한 설명이다.
③ X — '경호의 주체가 국가, 민간에 관계없이' 보호하는 모든 활동이라는 부분은 기관의 법적 형식이 아니라 활동의 실질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질적 의미의 경호이다. 틀린 표현은 '형식적 의미의 경호'이며, 올바른 표현은 '실질적 의미의 경호'이다.
④ O — 실정법에 인정된 기관이나 조직이 수행하는 경호활동을 기준으로 하므로 형식적 의미의 경호에 해당한다.
⑤ O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경호는 법률이 정한 기관·권한에 따른 경호이므로 형식적 의미의 경호에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③의 '국가, 민간에 관계없이'와 '모든 활동'은 범위를 넓게 잡는 실질적 의미의 핵심 표현이다. '실제 보호활동'이라는 말만 보고 형식적 의미로 판단하면 두 개념을 뒤바꾸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법령, 실정법, 법정 기관, 권한이 기준이면 형식적 의미로 판단한다. 주체의 공·사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포괄하면 실질적 의미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형식은 법과 기관, 실질은 보호활동의 내용이다.

NoteBase

13. 경호기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호기만이란 위해기도자가 위해기도를 포기하거나 위해기도자의 위해시도가 실패하도록 유도하는 변칙적인 경호기법을 말한다.

② 기동간 경호기만이란 경호대상자가 각종 기동수단을 이용하여 기동할 때 실시하는 경호기만이다.

③ 기만방법에는 일반인처럼 자연스러운 옷차림과 행동,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이동 등이 있다.

④ 경호대상자 차량의 위치 변경은 최소화하며, 반드시 대중의 시야를 벗어나지 않았을 때 사용한다.

⑤ 위장 경호대상자 차량을 사용하며, 다양한 대형을 변칙적으로 사용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경호기만의 뜻과 기동·외형·이동 방향·차량 운용·위치 변경을 이용한 기만방법의 적용 조건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경호기만은 위해기도자가 경호대상자의 실제 위치나 이동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게 하여 위해기도를 포기하게 하거나 실패하도록 유도하는 변칙적 경호기법이다. 위치 변경에 의한 기만은 교대 장면이 드러나면 효과가 없으므로 대중의 시야에서 벗어난 때 실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경호기만은 위해기도자를 속여 위해기도를 포기하게 하거나 실패하도록 유도하는 변칙적 경호기법이다.
② O — 기동간 경호기만은 경호대상자가 각종 기동수단을 이용하여 이동할 때 실시하는 기만이다.
③ O — 일반인처럼 자연스럽게 옷을 입고 행동하거나 예상하지 않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은 경호대상자의 외형이나 이동 방향을 감추는 기만방법이다.
④ X — 틀린 표현은 '대중의 시야를 벗어나지 않았을 때'이다. 위치 변경 과정이 노출되면 기만 효과가 사라지므로, 올바르게는 경호대상자 차량의 위치 변경을 최소화하고 대중의 시야를 벗어났을 때 사용한다.
⑤ O — 위장 경호대상자 차량을 사용하고 여러 대형을 변칙적으로 운용하면 실제 경호대상자의 위치와 이동 형태를 파악하기 어렵게 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④는 '위치 변경은 최소화한다'는 앞부분이 옳아 전체 문장도 옳아 보이게 만든다. 그러나 위치를 바꾸는 장면이 대중에게 보이면 실제 차량을 드러낼 수 있으므로 '시야를 벗어나지 않았을 때'가 반대로 쓰인 표현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경호기만 선지는 그 행동이 실제 경호대상자의 위치·이동 방향·차량을 감추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위치 변경형에서는 변경 횟수를 줄이고, 변경 장면이 외부에 보이지 않는 조건인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위치 변경은 최소화하고, 시야 밖에서 실시한다.

NoteBase

14. 3중 경호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호영향권역을 공간적으로 구분한 3중의 경호막을 통해 구역별로 동등한 경호조치를 실시하여 위해요소에 대한 중첩확인이 이루어진다.

② 세계의 주요 경호기관이 3중 경호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으나 적용범위와 방법에서는 차이가 존재한다.

③ 안전구역은 완벽한 통제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경호원의 확인을 거치지 않을 경우 인원의 출입은 금지된다.

④ 위해행위에 대한 조기경보체제를 확립하고 경호자원과 시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

⑤ 위해기도 시 시간 및 공간적으로 이를 지연시키거나 피해의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어 전략이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3중 경호가 여러 겹의 방어선을 두되 각 경호구역의 기능과 위험 수준에 따라 차등적인 경호조치를 적용한다는 원리를 묻는다.

핵심 개념

3중 경호는 경호대상자 주위에 여러 겹의 경호구역을 설정하여 위해요소를 단계적으로 탐지·차단·지연하는 종심방어 방식이다. 각 구역에는 똑같은 조치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 임무, 위험도에 맞는 차등적 조치를 적용한다. 안전구역에서는 출입자를 엄격히 확인하고, 외곽에서는 조기경보와 위해기도의 지연·저지에 중점을 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표현은 '구역별로 동등한 경호조치'이다. 3중 경호에서는 구역별 기능과 위험 수준에 따라 차등적인 경호조치를 실시한다. 여러 경호막은 단계적으로 위해요소를 탐지하고 차단하는 상호 보완 구조이다.

② O
세계의 주요 경호기관은 경호대상자 주위에 여러 겹의 방어선을 두는 3중 경호의 기본 원리를 활용한다. 다만 기관의 임무, 대상, 환경에 따라 구역의 범위와 구체적인 운용 방법은 달라질 수 있다.

③ O
안전구역은 경호대상자와 가장 가까운 핵심 구역이므로 엄격한 출입 통제와 신원·용무 확인이 요구된다. 경호원의 확인을 거치지 않은 사람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④ O
다중 방어선은 외곽 단계에서 이상 징후를 빨리 발견하는 조기경보 기능을 한다. 위해요소를 바깥에서부터 처리할 수 있어 경호자원과 대응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한다.

⑤ O
위해기도가 발생하더라도 여러 경호막이 이를 연속적으로 지연·저지한다. 이는 경호대상자에게 도달하기 전 대응 시간을 확보하고 피해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어 전략이다.

오답 포인트

①은 '여러 겹'이라는 형식 때문에 각 구역에도 같은 조치를 적용한다고 착각하게 만든다. 3중 경호의 핵심은 경호막의 반복이 아니라 구역별 임무에 맞춘 차등 통제와 단계적 차단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3중 경호 관련 선지는 '다중 방어선, 차등 조치, 조기경보, 출입 통제, 지연·저지'와 연결되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반대로 모든 구역에 '동등한·획일적인 조치'를 적용한다는 표현은 틀린 것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3중 경호는 여러 겹으로 막고, 구역별로 다르게 통제하며, 바깥에서 먼저 발견해 안쪽 도달을 늦추는 방식이다.

NoteBase

15. 안전대책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적.물적.지리적 취약요소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며, 폭발물 탐지.제거 및 안전점검, 검식작용 등을 실시한다.

② 위해요소 제거를 위한 순찰, 출입통제, 검측장비 등을 활용한 안전검색을 실시하여 안전을 유지한다.

③ 안전검측 실시 전 행사장.연도로 구분하여 지형답사를 실시한 후, 정확한 요도를 작성하여 검측대상을 파악한다.

④ 검측은 책임구역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반복 실시하되, 중복해서 실시한다.

⑤ 통로에서는 중앙을 중점 검측하고 높은 곳보다는 낮은 곳을, 능선이나 곡각지 등 의심 가는 곳은 반복해서 검측한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안전대책작용의 일반 원칙과 안전검측의 장소별 실시 요령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특히 통로 검측에서 높은 곳과 낮은 곳 중 어디를 우선 살피는지가 핵심이다.

핵심 개념

안전대책작용은 경호대상자 주변의 인적·물적·지리적 취약요소를 미리 찾아 제거하거나 통제하여 위해 가능성을 낮추는 예방 활동이다. 안전검측은 행사장과 이동로를 구역별로 조사하여 폭발물 등 위해물의 유무와 안전 상태를 확인하는 활동이며,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책임구역을 나누되 경계 부분은 중복 검측한다. 통로에서는 중앙을 중점으로 보고 낮은 곳보다 높은 곳, 능선·곡각지 등 은닉이나 위해 가능성이 의심되는 지점을 반복 검측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인적·물적·지리적 취약요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폭발물 탐지·제거, 안전점검과 검식을 실시하는 것은 안전대책작용에 해당한다.

② O — 위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순찰, 출입통제, 검측장비 등을 활용한 안전검색을 실시하는 것은 안전 유지의 기본 방법이다.

③ O — 행사장과 이동경로를 구분하여 지형답사를 한 뒤 정확한 요도를 작성하면 검측구역과 검측대상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④ O — 책임구역을 명확히 나누면서도 경계 부분을 중복 검측하면 담당 공백과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

⑤ X — 틀린 표현은 '높은 곳보다는 낮은 곳'이다. 통로에서는 중앙을 중점 검측하되 낮은 곳보다 높은 곳을 살피고, 능선이나 곡각지 등 의심되는 곳을 반복 검측하는 것이 올바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⑤는 중앙 중점 검측, 능선·곡각지 반복 검측이라는 맞는 내용을 함께 제시한 뒤 '높은 곳보다는 낮은 곳'만 뒤집었다. 통로 주변의 높은 지점은 관측·은닉 또는 위해 가능성을 확인해야 하므로 우선 검측 대상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안전검측 선지는 '사전 답사와 요도 작성 → 책임구역 구분 → 경계 부분 중복 확인 → 취약·의심 지점 반복 검측'의 흐름으로 판단한다. 통로의 높낮이를 비교하면 '낮은 곳보다 높은 곳'을 우선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통로 검측은 중앙 중점, 낮은 곳보다 높은 곳, 능선·곡각지는 반복 확인이다.

NoteBase

16. <보기>의 경호경비 관련법을 제정 연도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 기>

㉠ 청원경찰법 ㉡ 대통령경호실법 ㉢ 경찰관 직무집행법
㉣ 용역경비업법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① ㉠-㉣-㉡-㉤-㉢
② ㉡-㉤-㉠-㉢-㉣
③ ㉡-㉤-㉢-㉣-㉠
④ ㉢-㉠-㉡-㉤-㉣
⑤ ㉢-㉡-㉤-㉠-㉣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경호·경비 관련 법률의 제정 연도를 비교하여 시간순으로 배열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법률의 시행 연도가 아니라 제정 연도를 기준으로 선후를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제정 연도 = 법률이 처음 만들어져 공포된 연도이다. 시행일은 법률의 효력이 실제로 발생한 날이므로 제정일과 다를 수 있다.

핵심 구분

각 법률의 최초 제정 연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1953년, 청원경찰법 1962년, 대통령경호실법 1963년,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1969년, 용역경비업법 1976년이다. 따라서 올바른 순서는 ㄷ → ㄱ → ㄴ → ㅁ → ㄹ이다. 용역경비업법은 1976년에 제정되고 1977년에 시행되었으므로, 이 문항에서는 1976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ㄱ(청원경찰법, 1962년)보다 먼저 제정된 ㄷ(경찰관 직무집행법, 1953년)을 마지막에 둔 것이 틀리다. 틀린 배열 ㄱ-ㄹ-ㄴ-ㅁ-ㄷ은 ㄷ-ㄱ-ㄴ-ㅁ-ㄹ로 고쳐야 한다.
② X — ㄴ(대통령경호실법, 1963년)을 ㄷ(1953년)과 ㄱ(1962년)보다 앞에 둔 것이 틀리다. 틀린 배열 ㄴ-ㅁ-ㄱ-ㄷ-ㄹ은 ㄷ-ㄱ-ㄴ-ㅁ-ㄹ로 고쳐야 한다.
③ X — ㄴ(1963년)을 맨 앞에 두고 가장 이른 ㄷ(1953년)을 뒤에 둔 것이 틀리며, ㄱ(1962년)을 마지막에 둔 것도 연대와 맞지 않는다. 틀린 배열 ㄴ-ㅁ-ㄷ-ㄹ-ㄱ은 ㄷ-ㄱ-ㄴ-ㅁ-ㄹ로 고쳐야 한다.
④ O — ㄷ(1953년) → ㄱ(1962년) → ㄴ(1963년) → ㅁ(1969년) → ㄹ(1976년)로 제정 연도가 빠른 순서와 정확히 일치한다.
⑤ X — ㄷ을 맨 앞에 둔 것은 맞지만, ㄴ(1963년)을 ㄱ(1962년)보다 앞에 두고 ㄱ을 ㅁ(1969년) 뒤에 둔 것이 틀리다. 틀린 배열 ㄷ-ㄴ-ㅁ-ㄱ-ㄹ은 ㄷ-ㄱ-ㄴ-ㅁ-ㄹ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ㄱ 청원경찰법과 ㄴ 대통령경호실법의 연도가 1962년과 1963년으로 가깝다는 점, 그리고 ㄹ 용역경비업법의 제정일은 1976년이지만 시행일은 1977년이라는 점이 함정이다. 제정 연도를 묻는 문항에서 시행 연도를 섞으면 순서를 잘못 판단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가장 이른 ㄷ(1953년)과 가장 늦은 ㄹ(1976년)을 양끝에 놓고, 1960년대 법률을 ㄱ(1962년) → ㄴ(1963년) → ㅁ(1969년) 순으로 배열한다. 선택지에서는 이 양끝과 1960년대 내부 순서를 함께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경직 53 → 청원 62 → 대통령경호 63 → 전직대통령 69 → 용역경비 76이다.

NoteBase

17. 인적 위해 요소의 검사를 위한 비표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작된 비표는 경호부서에서 검인하고 원판은 안전하게 관리한다.
② 비표의 종류는 적을수록 좋다.
③ 경호근무자는 안전대책 활동 시 비표를 제거한다.
④ 행사구분별 별도의 비표를 운용한다.
⑤ 비표는 수량을 정확하게 인수, 인계하여 분실 및 훼손을 방지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인적 위해 요소를 검사·통제하기 위한 비표의 제작, 패용, 구분, 인수·인계 원칙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비표는 행사 관계자의 신분과 출입 권한을 신속하게 식별하여 허가되지 않은 사람의 접근을 통제하는 표지이다. 비표관리의 핵심은 종류의 단순화, 행사별 구분, 철저한 검인과 원판 관리, 정확한 수량 통제이며, 경호근무자는 안전대책 활동 중 비표를 패용하여 신분과 권한을 드러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제작된 비표는 위조·복제를 막고 발급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호부서가 검인하며, 제작 원판도 안전하게 관리한다.
② O — 비표의 종류가 지나치게 많으면 식별과 통제가 복잡해지므로 필요한 범위에서 종류를 적게 운용하는 것이 좋다.
③ X — 틀린 표현은 '안전대책 활동 시 비표를 제거한다'이다. 실제로는 경호근무자의 신분과 출입 권한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 활동 시 비표를 패용해야 한다.
④ O — 행사마다 출입 대상과 통제 범위가 다르므로 행사 구분별로 별도의 비표를 운용한다.
⑤ O — 비표의 유출이나 무단 사용을 막으려면 수량을 정확히 인수·인계하고 분실 및 훼손을 방지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③은 경호근무 중 비표가 노출되면 안 된다고 오해하게 만드는 선지이다. 그러나 비표는 신분과 출입 권한을 확인하기 위한 통제 수단이므로 안전대책 활동에서는 제거가 아니라 패용이 원칙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비표 관련 선지는 '식별은 쉽게, 위조·유출은 어렵게'라는 기준으로 판단한다. 종류는 단순화하고 행사별로 구분하며, 검인·원판·수량은 엄격히 관리하고 근무 중에는 비표를 패용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비표는 적게 구분하고, 철저히 관리하며, 근무 중 패용한다.

NoteBase

18. <보기>는 보안업무규정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상 보호구역의 중요도에 따른 분류와 개념이다. (가)~(다)에 해당하는 용어로 옳은 것은?

<보 기>

(가) : 비밀 또는 국·공유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울타리 또는 방호·경비인력에 의하여 일반인의 출입에 대한 감시가 필요한 지역

(나) : 비인가자가 비밀, 주요시설 및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내를 받아 출입하여야 하는 구역

(다) : 보안상 매우 중요한 구역으로서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구역

	(가)	(나)	(다)
①	제한구역	통제구역	제한지역
②	제한구역	제한지역	통제구역
③	제한지역	통제구역	보호지역
④	제한지역	통제구역	제한구역
⑤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

정답 5번

쟁점

이 문제는 보호지역을 중요도에 따라 제한지역·제한구역·통제구역으로 구분하는 기준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감시, 안내, 출입 금지라는 단계별 통제 방식과 각 명칭을 정확히 연결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보호지역 =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인원·문서·자재·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일정한 범위의 장소이다.

비인가자 = 해당 비밀이나 시설 등에 접근하거나 출입할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사람이다.

NoteBase

핵심 구분

「보안업무규정」 제34조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르면 보호지역은 중요도에 따라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으로 나뉜다.
제한지역은 울타리 또는 방호·경비인력에 의하여 승인받지 않은 사람의 접근이나 출입을 감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제한구역은 비인가자가 비밀, 주요시설 및 III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안내를 받아 출입하여야 하는 구역이다.
통제구역은 보안상 매우 중요한 곳으로서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구역이다.
따라서 (가)는 제한지역, (나)는 제한구역, (다)는 통제구역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가)를 제한구역, (나)를 통제구역, (다)를 제한지역으로 연결하여 세 항목이 모두 틀렸다.
틀린 표현: 제한구역－통제구역－제한지역
올바른 표현: 제한지역－제한구역－통제구역

② X
(다)의 통제구역은 맞지만, (가)와 (나)의 명칭을 서로 바꾸어 놓았다. 울타리·방호·경비인력에 의한 감시는 제한지역이고, 안내를 받아 출입하는 곳은 제한구역이다.
틀린 표현: (가) 제한구역, (나) 제한지역
올바른 표현: (가) 제한지역, (나) 제한구역

③ X
(가)의 제한지역은 맞지만, (나)는 통제구역이 아니라 제한구역이고 (다)는 보호지역이 아니라 통제구역이다. 보호지역은 제한지역·제한구역·통제구역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다.
틀린 표현: (나) 통제구역, (다) 보호지역
올바른 표현: (나) 제한구역, (다) 통제구역

④ X
(가)의 제한지역은 맞지만, (나)와 (다)를 서로 바꾸어 놓았다. 안내를 받아 출입하는 곳은 제한구역이고,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곳은 통제구역이다.
틀린 표현: (나) 통제구역, (다) 제한구역
올바른 표현: (나) 제한구역, (다) 통제구역

⑤ O
(가)의 감시가 필요한 지역은 제한지역, (나)의 안내를 받아 출입하는 구역은 제한구역, (다)의 비인가자 출입이 금지되는 구역은 통제구역이므로 모두 옳게 연결되었다.

오답 포인트

‘제한지역’과 ‘제한구역’은 이름이 비슷하여 바꾸기 쉽다. 이 문제에서는 (가)의 ‘감시’, (나)의 ‘안내’, (다)의 ‘출입금지’가 각각의 명칭을 가르는 결정적 표현이다. 또한 ‘보호지역’은 세 분류 중 하나가 아니라 이들을 모두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통제 강도가 높아지는 순서로 판단한다. 일반인의 접근·출입을 감시하면 제한지역, 안내를 받아 출입하면 제한구역, 비인가자의 출입 자체가 금지되면 통제구역이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감시ㅡ제한지역, 안내ㅡ제한구역, 금지ㅡ통제구역으로 연결한다.

NoteBase

1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국회의사당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는 거리로 옳은 것은?

① 100m 이내
② 150m 이내
③ 200m 이내
④ 250m 이내
⑤ 300m 이내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국회의사당 주변의 옥외집회·시위 제한 거리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거리의 기준점과 제한 범위를 정확히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경계 지점 = 국회의사당 건물의 중심이나 출입문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국회의사당의 경계를 기준으로 거리를 재는 출발점이다.

핵심 구분

2019년 시험 시행 당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국회의사당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었다. 국회의사당에 관한 예외 요건은 2020년 개정으로 도입되었으므로 이 문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 100*m* 이내가 법에서 정한 원칙적 제한 거리이므로 옳다.
② X — 150*m* 이내는 법정 거리보다 50*m* 넓게 잡은 것이다. 틀린 표현: '150*m* 이내' → 올바른 표현: '100*m* 이내'이다.
③ X — 법은 200*m* 이내가 아니라 100*m* 이내를 규정한다. 틀린 표현: '200*m* 이내' → 올바른 표현: '100*m* 이내'이다.
④ X — 250*m* 이내는 법정 제한 거리가 아니다. 틀린 표현: '250*m* 이내' → 올바른 표현: '100*m* 이내'이다.
⑤ X — 300*m* 이내는 법정 제한 거리가 아니다. 틀린 표현: '300*m* 이내' → 올바른 표현: '100*m* 이내'이다.

오답 포인트

제한 대상의 중요성을 보고 가장 긴 거리인 300*m*를 고르거나, 일반적인 경호구역의 거리와 혼동하기 쉽다. 이 문항은 국회의사당 '경계 지점'부터 100*m* 이내라는 법정 수치를 묻는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국회의사당 주변의 옥외집회·시위 금지 장소를 물으면 먼저 기준점이 '국회의사당의 경계 지점'인지 확인하고, 원칙적 제한 범위를 100m 이내로 판단한다. 허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묻는 문항에서는 법정 예외 요건도 함께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국회의사당 경계에서 백 미터, 즉 100m 이내가 원칙적 제한 구역이다.

NoteBase

20. <보기>의 상황별 필요한 경호의 분류로 옳은 것은?

<보 기>

국외 원수가 사전에 계획된 국제행사를 목적으로 국내에 방한하였으며, A호텔에서 투숙을 할 예정이다.

(가) 국외 원수의 내한

(나) A호텔에서의 투숙

(다) 사전에 계획된 국제행사로 인한 내한

	(가)	(나)	(다)
①	갑호 경호	행사장경호	공식경호
②	갑호 경호	숙소경호	공식경호
③	갑호 경호	행사장경호	비공식경호
④	을호 경호	숙소경호	비공식경호
⑤	을호 경호	행사장경호	비공식경호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국외 원수라는 경호대상, 호텔 투숙이라는 경호장소, 사전에 계획된 국제행사라는 행사의 성격을 각각 다른 분류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갑호 경호는 국외 원수처럼 가장 높은 수준의 경호가 필요한 대상을 위한 경호이다.
숙소경호는 경호대상자가 투숙하거나 머무는 숙소를 중심으로 실시하는 경호이고, 행사장경호는 공식 일정이 진행되는 행사장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경호이다.
공식경호는 사전에 계획된 공식 일정이나 행사에 따른 경호이고, 비공식경호는 사전에 공식적으로 계획되지 않은 사적 활동 등에 따른 경호이다.
따라서 (가)는 갑호 경호, (나)는 숙소경호, (다)는 공식경호로 분류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가)의 갑호 경호와 (다)의 공식경호는 맞지만, (나)의 '행사장경호'가 틀렸다. A호텔에서의 투숙은 행사가 열리는 장소가 아니라 경호대상자가 머무는 숙소를 보호하는 것이므로 숙소경호이다. 올바른 조합은 '갑호 경호－숙소경호－공식경호'이다.

② O
국외 원수는 갑호 경호 대상이고, A호텔 투숙은 숙소경호에 해당한다. 또한 사전에 계획된 국제행사를 목적으로 한 내한이므로 공식경호에 해당한다. 세 분류가 모두 옳다.

③ X
(가)의 갑호 경호는 맞지만, (나)의 '행사장경호'와 (다)의 '비공식경호'가 틀렸다. 호텔 투숙은 숙소경호이고, 사전에 계획된 국제행사로 인한 내한은 공식경호이다. 올바른 조합은 '갑호 경호－숙소경호－공식경호'이다.

④ X
(나)의 숙소경호는 맞지만, (가)의 '을호 경호'와 (다)의 '비공식경호'가 틀렸다. 국외 원수는 갑호 경호 대상이고, 사전에 계획된 국제행사는 공식경호에 해당한다. 올바른 조합은 '갑호 경호－숙소경호－공식경호'이다.

⑤ X
(가)의 '을호 경호', (나)의 '행사장경호', (다)의 '비공식경호'가 모두 틀렸다. 각각 갑호 경호, 숙소경호, 공식경호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국제행사'라는 말만 보고 호텔 투숙까지 행사장경호로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구체적 장소가 호텔의 숙소이므로 숙소경호이다. 또한 '국외 원수'는 대상에 따른 분류이고, '사전에 계획된 국제행사'는 행사의 성격에 따른 분류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문구마다 분류 기준을 나눈다. 경호대상이 누구인지에서는 경호 등급을, 어디에 머물거나 활동하는지에서는 숙소경호와 행사장경호를, 일정이 사전에 공식적으로 계획되었는지에서는 공식경호와 비공식경호를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국외 원수는 갑호, 호텔 투숙은 숙소, 사전 계획 국제행사는 공식이다.

NoteBase